

“왜구” 문제를 통해 본 고려 사람들과 일본인들의 교류의 역사

『왜구와 고려·일본 관계사』에 대한 서평

이영 지음, 혜안, 2011, 296쪽

이강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조교수, 한국중세사 전공
sisko104@hotmail.com

I. 머리말

필자는 고려시대 전공자로서,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고려-원제국 관계사를 정치·경제·법제의 차원에서 검토해온 사람으로서, 항상 뒤가 ‘켁기는’ 바가 있었다. 고려시대 전체를 살피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13-14세기 동아시아사”를 공부하게 된 처지에, 나의 시선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너무 ‘중국 쪽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때때로 나를 엄습하였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또는 구체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검토한다고 할 때, 한반도와 중국 대륙은 물론, 일본 열도에 대해서도 검토를 아니 할 수 없다. 이 세 축 중 어느 하나라도 빠졌을 경우, 그런 상황에서 그려지는 동북아시아사는 뭔가 ‘결여’를 내포한 채 출발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다만 한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한국사를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관심과 노력을 일본사 연구에 투입하기도 곤란한 노릇이다. 그래서 최소한 13-14세기의 한일 관계사에 대해서는 차후에나 본격적으로 검토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논문을 통해 이영 교수의 작업들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그의 작업들은 하나같이 ‘왜구’를 핵심 소재로 삼고 있지만, 그것은 논의의 출발점일 뿐 저술 논문마다 13세기 이래 일본의 역사를 치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한 작업들을 토대로 당시의 고려-일본 관계사를 담담히 재구성해가고 있는 저자의 노력에 말없는 응원을 보낸 지가 이미 여러 해 되었다. 이번 기회에 그의 역작에 대한 서평을 자청함으로써 필자의 그러한 입장을 드러내고자 한다.

II. 책의 내용에 대한 소개

저자의 이번 책은 고려 초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작성된 챕터들로 구성돼 있다.

1장은 ‘10세기 전반’에서 ‘11세기 말’에 이르는 150여 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당시 진행된 고려와 일본 간의 교류를 다루고 있다. 이 시기를 다루면서 저자는 2개의 연도에 주목할 것을 권하고 있다. ‘1019년’과 ‘1093년’이 그것이다.

저자가 소개한 바와 같이, 『일본기략(日本紀略)』이나 『소우기(小右記)』 등의 일본 측 기록을 통해 10세기 전·후반 고려정부가 일본 측에 몇 차례 사신을 파견하였고(937, 972, 997), 그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이 대체로 냉담했음이 확인된다. 모리 가쓰미(森克己) 등 일본학자들의 연구에서는 당시 일본정부가 해적 문제 등을 우려해 고려와 공식 수호를 맺는 것에 주저하고 있었다고 보았으며, 저자 역시 그러한 설명을 수용하고 있다. 아울러 고려인의 일본 표착과 내항, 그리고 일본인의 고려 귀화 기사들이 늘어나는 등 민간 차원의 교류는 계속되었다는 일본 측 연구(다지마 이사오(田島公))도 소개하였다.

그러한 상황에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저자가 판단한 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1019년’이다. 여진족이 대마도, 이키섬(壹岐島), 지쿠젠(筑前), 히젠(肥前) 하카타(博多)만을 습격한 것으로, 당시 철수하던 여진군을 고려

수군이 공격하여 붙잡혀 가던 일본인 포로 300명을 구출한 것이 양국관계 개선의 단초가 된 것이다. 저자는 이 일을 계기로 일본의 대 고려 경계심이 풀렸다고 설명하면서, 11세기 중엽 대마도 사절(1049, 1051) 및 일본국 승려(1056) 등이 고려를 방문하였고, 1073년 일본국인의 방문을 시발로 1089년 규슈 다자이후(大宰府) 상객(1089)의 방문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상인과 관리들이 16여 년간 고려를 활발히 방문했음을 소개하였다. 실제로 『고려사』에서 확인되는 이 시기 일본인들의 고려 방문은 송나라 상인들의 고려 방문 빈도에 준할 정도로 활발했으며, 출신지역도 대마도, 규슈(히젠) 등 다양하였다. 이러한 방문은 저자도 소개했듯이 『수좌기(水左記)』에 기록된 1079년 고려 문종의 의사 요청 및 일본정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러한 우호적인 관계가 11세기 말에 이르러 다시금 돌변했으니, 안서도호부의 일본선박 나포사건이 있었던 1093년이 바로 그 시점이다. 1093년 안서도호부의 관할 아래에 있던 연평도 순검군이 이른바 ‘송·일 해적선’을 적발하여 나포한 것으로, 이후 일본으로부터의 상인 및 사신 내항 관련 사료는 급감하게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과 일본 학자들 간에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첫 번째 쟁점은 나포된 이 선박의 ‘정체’이다.

일본 측 연구들은 대체로 1093년 나포된 이 선박이 ‘해적선’이 아닌 순수 ‘상선’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한 근거는 물론 제시돼 있지 않다. 반면 저자는 1092년 일본정부가 요나라에서 귀국한 일본의 상인 겸 승려 ‘明範’을 조사하고, 2년 뒤 대재권수와 대마도국사가 공모해 명범을 몰래 요에 파견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후, 두 사람을 ‘밀무역죄로 교토로 소환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당시 일본인들이 정부 차원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요(對遼) 밀무역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거론한 것이다. 저자는 더 나아가 1093년에 적발된 송나라와 일본 사람들 또한 예성항 근처가 아닌 연평도 근처에서 나포당한 것에서 엿볼 수 있듯이, 요에 가서 밀무역을 하려다가 고려군에 의해 나포당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요컨대 고려정부가 이들을 나포한 것은, 당시 요나라와 민감한 관계에 있던 고려가 요나라로 향하는 선박을 ‘치안’ 차원에서 검문, 단속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들이 해적이었다면 고려 남해안을 노리는 것이 더 자연스

러웠을 것이라고도 추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자 역시 1093년 나포된 이 선박이 해적선이 아닌 상선이었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지만, 선박이 나포된 배경은 일본 측과 전혀 달리 해석하였다. 나포 자체는 고려-요 간에 군사, 외교적 긴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선박이 인근 해역에 불쑥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봄으로써, ‘고려의 내부 사정이 복잡해서’ 나포된 것이라는 유의 일본 측 설명을 일축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저자의 설명이 특히 흥미로운 것은, 고려가 이처럼 연평군 인근을 통과하는 상선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연유를, 당시 극성하던 여진 해적들로부터의 ‘트라우마’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동여진’ 또는 ‘동번’ 해적임을 명시한 사례들(1064, 1073, 1084, 1097) 외에, 동계병마사와 진명도부서, 또는 초도(椒島)가 관련된 해적들이 등장하는 기사들(1068, 1096)까지도 감안하여 11세기 후반 여진해적의 한반도 침구가 빈발했던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093년 송나라와 일본 사람들이 탑승한 ‘해적선’의 출현은 고려정부에 큰 충격이었을 것이며, 일반 상선들이 언제나 ‘해적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인들에게 심어주었을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설명인데,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한편 두 번째 쟁점은, 이 나포사건 후 일본선박들의 왕래가 끊긴 ‘연유’이다.

모리 가쓰미를 위시한 일본학자들은 11세기 말부터 고려의 정치 부패 및 지방 반란이 심각해져 일본인들이 고려 대신 송으로 가게 된 것이라 주장해왔다. 일국의 내수시장은 언제나 변동과 동요를 겪곤 함을 고려할 때, ‘한반도 시장의 불안정성’을 외국상인들의 방문이 중단된 사유로 보는 것은 대단히 과장된 시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필자가 보기에 당시 일본인들의 고려 방문 감소는 일본의 항해술 및 조선술 발전, 그리고 그간 진행되어온 송-일 교역의 진화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저자 역시 일본 측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대신 저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인들이 더 이상 예성강을 통해 수도로 직접 오지 못하게 되었고, 금주(金州) 등 한반도 남해안을 경유하여 육로로 개경에 이르러야 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1093년 이전에는 일본인들이 해로로 한반도 서해안에 도착하여 고려국왕을 예방한 사례들이 있는 반면, 1093년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능한 추정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의종대 이문탁(李文鐸)이라는 인물이, 증서문하성과 추밀원이 금주의 '동남해도부서'로부터 개경의 중앙정부에 상신된 '대마도 관리의 첩'을 심의하여, '상서도성의 첩'으로 회답하려 한 것에 제동을 걸고, 대마도 관리의 상대 창구는 중앙 부서가 아닌 동남해도부서 여야 함을 주장한 것에 주목하였다. 저자의 주장과 같이, 고려정부가 일본과의 교류창구를 동남해도부서로 일원화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된다. 이럴 경우, 개경 직행이 금지된 일본상인들이 언제나 금주를 경유해 육로로 개경에 와야 했을 것이다. 금주에서 교역을 벌일 것도 별로 없고 금주에서 개경까지 육로로 이동하는 것은 지나치게 힘든 상황에서, 결국 상당수의 일본상인들이 한반도행 발걸음을 접었을 것이라는 저자의 설명이다. 필자 역시 동의하는 바이다.

다음 2장에서는 주로 12세기 고려와 일본의 관계가 거론되고 있다. 이 장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연도는 '1169년'이며,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것은 고려정부와 일본 대마도 사이에 일종의 '진봉(進奉)관계'가 형성된 시점이다. 진봉이라 함은 거칠게 풀자면 '예물을 바치면서 상대 국왕에게 예를 표하는' 행위라 이해된다. 당연히 일본 연구들에서는 저자의 이러한 '진봉' 개념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견을 표출해왔다.

일본학자들의 경우, 고려-대마도 간 교류의 연원을 11세기 후반 활발했던 일본상인들의 대고려 '사헌무역'에서 찾고 있다. 다만 그들은 그러한 관계를 '공적'인 것으로는 보지 않으며, 심지어 상업적으로 미발달 상태였던 고려가 일본과의 무역에 부담을 느끼고 그를 제한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진봉관계'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고려의 역사에 대한 심각한 무지를 드러내는 가와조에 쇼지(川添昭二)류의 견해에 대해서는 논평할 가치가 없겠지만, 진봉관계가 단순한 무역 교류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이었음에 동의하는 야마우치 신지(山内晉次)류의 견해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자의 경우 이 진봉관계를 단순히 사적 또는 개인적인 관계로 보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아울러 그것을 단순히 상업적인 관계였다고 평가하는 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예제에 의거하여, 그것도 매년 진행되었음을 들어 그러한 관계가 공적이고도 상시적인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울러

그러한 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관계가 어디까지나 대마도와 고려 사이의 독자적인 관계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계가 일본 중앙정부(또는 규슈의 다이자이후) 역시 인지하고 있던 관계였음을 밝히려 하고 있다.

그러한 진봉관계의 출범 시점을 가늠하기 위해, 저자는 새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원정(元正) 의식’과 고려국왕에 대한 ‘진봉의례’가 12세기 후반인 의종대에 “일체화”되었음에 주목하였다. 또 ‘진봉’의 실질적 주체로는 일본 대마도의 관리들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한 논증과정에는 1206년의 『평호기(平戸記)』 기록, 1227년 5월의 『오처경(吾妻鏡)』 기록, 그리고 1263년 고려정부가 일본에 왜구를 금해줄 것을 요청하며 보낸 글의 내용 등이 활용되었다. 요컨대 고려-대마도 간 진봉관계가 의종대 후반, 또는 ‘1169년’을 전후한 시점에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저자의 견해라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13세기 후반이었던 ‘1275년’과 ‘1281년’을 전후한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즉 원제국의 일본정벌이 있었던 당시, 고려와 일본 사이에 전개된 관계의 맥락을 다룬 것이다. 1169년 이래 우호적으로 유지되던 양국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일본정벌 이후에는 일본과 고려 양쪽 모두 상대방으로부터의 침략 가능성에 긴장하는 관계가 형성되었음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사실 이 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따로 있다. 쿠빌라이의 일본침공에 직접적 계기를 제공한 것이 고려인 조이(趙彝)였다는 저자의 지적이 그것이다. 조이의 언급을 인용한 1266년 11월 원 황제의 조서를 근거로, 원제국의 일본정벌에 고려인들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저자는 조이뿐만 아니라 그 대척점에 서 있던 이장용(李藏用)의 경우도 분석하고 있다. 몽골 사신의 일본 방문을 적극 막으려 했던 이장용의 경우, 고려가 일찍이 일본과 통호한 적이 없음을 주요한 방어 논리로 내세웠다. 저자는 고려가 교토조정과는 통호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장용의 주장이 사실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마도와 진봉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 일본 측에 원조를 타진하고 있던 삼별초(三別抄)의 세력과

관련해서는, 1270년대 초 삼별초가 경상도 금주(金州)를 공격함으로써, 고려-원 연합군의 일본정벌을 저지하려 한 것이라 추정하였다. 삼별초가 일본과 협력해 이른바 ‘여-몽’ 연합군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과 접촉하고, 자신들의 적극적인 의도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전력을 분산하여 금주지역으로 부대를 이동시킨 것으로 보았다. 저자는 또 삼별초의 그러한 움직임이 “대마도의 대고려 진봉”이라는 이전부터의 고려-일본 간 우호관계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어 이채롭다.

4장에서는 14세기 중반의 이른바 ‘경인년(庚寅年) 왜구’를 살피고 있다. 이 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13세기 중반 이래의 왜구와 14세기 중엽의 왜구를 비교하였다. 다음 그 두 시기 사이에는 정작 왜구의 활동이 부진했던 연유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14세기 중엽 왜구가 다시 흥성하게 된 배경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1223년 『고려사』에 왜구가 최초로 등장한 이래, 왜구의 침구 사례는 1265년까지 단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리고 일본정벌을 계기로 그러한 사례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14세기 중엽인 1350년(“경인년”) 2월에 이르러 갑자기 왜구 관련 기사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전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큰 침공들이 확인되며, 그 빈도도 매년 수차례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13세기 후반의 왜구는 일본학자들이나 저자 모두 우발적인 소규모 준동의 정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에 비해 ‘경인년’ 이후 왜구의 경우, 탐승하고 온 선박수가 최소 20척에서 최고 500척에 이르는 등 대규모 선단의 모습을 보였다. 단순한 해적 정도가 아닌 침공군 수준의 편대였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게다가 수도를 공략하고, 고려의 조세행정을 마비시키며, 연안 도서에 체재하면서 한반도 내륙 깊숙한 곳들을 침입한 점에서는, 조직화의 수준이 높고 상당한 전략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 저자의 관측이다.

당시 왜구들의 면모가 그러했다면, 저자의 평가대로 14세기 중엽의 ‘왜구’는 뛰어난 전투능력을 갖춘 전문적 전투 집단, 즉 군대로 보아야 할 존재였던 셈이다.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이 고려의 정규군을 패퇴시킨 것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13세기 후반의 경우 고려정부가 즉각적으로 일본에 왜구 방지를

요청한 데 비해, 14세기 중엽의 경우 고려정부의 대응이 달랐다. 저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시기 고려정부는 왜구 침구가 시작된 1350년으로부터 13년이나 지난 이후에나 비로소 일본에 왜구 방지를 요청하였다. 일본정벌로 인해 당시 고려와 일본의 사이가 안 좋았고, 원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일본에 사자를 파견하는 것을 고려정부가 주저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자는 판단하고 있다. 필자 역시 그에 동의하는 바이다.

저자는 이렇듯 13세기의 왜구와 14세기의 왜구를 간략히 비교한 후, 1265년 이래 1350년에 이르기까지 약 85년간 왜구의 발생 사례가 극소수에 그친 이유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저자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서의 이러한 ‘공백기’는 이 장에서는 1310년까지의 시기와 그 이후(이자 1350년 이전)의 시기로 나누어 소개돼 있다.

저자에 따르면, 원제국과 고려군의 일본침공으로 인해 일본사회가 받은 충격은 대단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 전 분야, 모든 계층이 거국적으로 경계태세에 들어가게 되었고, 특히 큐슈지역의 경우 가마쿠라 막부의 지휘 아래 ‘고케닌(御家人)’을 위시해 모든 지역 주민들이 ‘이국경고번역(異國警固番役)’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한 경비태세를 갖추게 된다. 1293년에는 이른바 ‘진제이탄다이(鎮西探題)’가 설치돼 큐슈지방의 행정, 군사, 재판업무를 통괄하게 된다.

저자는 이러한 경계태세가 이미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고 보았다. 1267년과 1268년 몽골의 일본침공 소문이 큐슈지역에 퍼져 긴장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그에 따라 막부가 수군에 충원할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서탐제(鎮西探題) 관할 하의 모든 지역에 선박수와 노꾼, 조타수의 명부를 제출하라 명령했으며, 그러한 인력확보 작업의 한 일환으로 이전에 비해 더욱 강력해진 “해적진압령”이 1275년 이전 이미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일단 인근의 해적들이 단속되었고, 해적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유동인구는 ‘막부의 수군’으로 포섭된 결과, 왜구의 한반도 침구 사례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저자의 이 같은 설명은 그야말로 탁월한 것이라 여겨지며, 그에 따르면 이 같은 해적단속령은 1301년에도 더욱 철저히 시행되어 1310년까지도 왜구의 침구 사례가 재발되지 않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이라 평가된다.

아울러 저자는 큐슈에서의 이러한 동향이 대마도에서도 똑같이 전개되어, 결국 해적 활동의 위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마쿠라

막부시대 중기 이래 대마도를 강력하게 지배해오던 슈고(守護) 겸 지토(地頭)였던 쇼니(少弐)씨와 지두대인 소宗(宗)씨가 바로 그러한 추세를 주도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저자에 따르면 1226년 금주에 침구한 대마도 출신의 왜구 ‘아쿠토(惡黨)’ 90명을 색출해 참수하고 고려에 사과했던 것 역시 쇼니씨였다. 1226년 4월 막부가 서국(西國)의 슈고들에게 내린 ‘아쿠토 진압령’을 쇼니씨가 충실히 이행한 결과라고 저자는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1263년 4월 웅신현 물도에 침입한 왜구에 대해 고려가 항의를 하자, 일본 측에서 단행한 똑같은 조치 역시 쇼니씨가 이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쇼니씨와 소씨 세력이 주도한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 종래 대마도에서 출발해 한반도를 침구하던 왜구의 활동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저자는 결론 내리고 있다.

다만, 1310년대를 넘어 1350년까지도 왜구가 계속 위축되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 또한 확실한 답은 제시하기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필자가 이해하기에 저자는 도쿠소(得宗) 전제통치 하의 막부가 “아쿠토”들을 진압하기 위해 1312년과 1318년 대규모 공세를 취했는데, 그것이 해상의 해적세력에 대한 단속효과를 발휘했다고 보는 듯하다. 일종의 내부 치안 강화 및 정치적 적대세력 격파가 왜구 감소로 이어졌다는 논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같은 해적 금압방침이 가마쿠라 막부 붕괴 이후 무로마치 막부로 계승되면서, 1350년까지 왜구 활동이 계속 침잠하게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1350년대 왜구의 활동이 재개된 원인 및 배경과 관련해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남조(南朝) 세력이던 ‘아시카가 다다후유(足利直冬)’의 공세에 당황한 ‘쇼니 요리히사(少弐頼尚)’ 측이, 고려의 사정을 미리 염탐하거나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대마도의 부대를 동원해 병량미 확보 차원에서 고려를 침공했다는 가설이 그것이다. 저자는 결국 남-북조 간의 전쟁으로 인해 남조의 군사세력이 고려에 쳐들어올 여건이 조성되고, 이후 남조 내 갈등으로 인해 1350년 2월 고려 침구가 시작된 것이라고 본 셈이다. 아울러 고려정부가 당시 왜구의 중심세력이 남조의 군사였다는 점과, 왜구라는 우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남북조 내란의 종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우왕대 고려정부가 일본 측과 주고받은 글들에서 추측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왜구에 대한 일본 학자들의 인식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지하듯이 일본인 학자들은 왜구 가운데 다수의 고려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뿌리 깊은 인식을 선보여왔다. 그리고 저자는 그러한 ‘왜구=고려, 일본인 연합론’, ‘왜구=고려, 조선인 주체론’ 등 일본 측의 ‘곡해’를 바로잡으려 수년간 노력해왔다. 왜구를 일본 또는 일본인이 아닌,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경향이 된 상태에서, 저자의 이러한 노력은 더욱 절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말의 존재를 근거로, ‘왜구’와 고려 내 ‘천민집단 양수척’ 간의 “연합”을 상징한 일본 측의 황당한 주장에 대해, 저자는 왜구가 한반도 남부 목장들을 습격한 결과였을 따름이라 일축하고 있다. 비록 ‘화척(禾尺)들이 몰려다니며 왜적 행세를 했음(詐爲倭賊)’을 보여주는 기사가 1382년 등장하긴 하지만, 저자의 분석처럼 당시의 가혹했던 징병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한 데에서 비롯되었거나, 당시 유행하던 범죄였을 따름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저자의 지적처럼 내륙의 화척들이 해전에 적합하지 않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마찬가지로 ‘왜구=제주도인’ 설 역시 전혀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주도인이 왜인의 언어를 쓰고 그 의복을 입고 해도를 오가며 약탈한다는 『성종실록』의 기록이 있긴 하지만, 15세기 후반의 기록을 14세기로 소급해 당시의 상황을 가늠할 근거로 삼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게다가 제주도인들이 굳이 ‘왜인’을 자처한 것에서, 어쨌든 당시 왜구의 일본인 비중이 컸다는 것도 엿볼 수 있다.

저자는 아울러 『고려사』 내에 ‘일본’과 ‘왜’의 용례가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고려사』에 등장하는 ‘왜구’의 개념이 일본학자들의 견해처럼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 그야말로 모호한 존재가 결코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일본인으로 구성된 해적단(또는 고려정부가 해적단으로 간주한 존재)을 가리키는 개념이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필자 역시 그에 동의한다.

마지막으로 침입경로 분석을 통해 왜구 집단의 주축이 고려인일 수 없었음을 밝힌 부분도 흥미롭다. 아울러 수많은 왜구 침구 기사가 모두 새로운 침구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며, 침략군의 이동경로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동의한다.

III. 저자의 여러 소중한 논점들과 필자의 줄건

저자의 이번 저술은 10세기부터 14세기에 이르기까지, 고려-일본 교류사의 중요한 연도들을 중심으로, 일본학자들의 관점을 치열하게 논박하며 고려-일본 교류의 역사를 새로이 기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자의 각종 논점에 대해서는 마땅히 학계의 후속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고려-일본 교류의 역사를 고려 대외교류사의 범주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작업이 시급하게 요망된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과문함을 무릅쓰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보고자 한다. 저자가 이번 역작에서 선보인 논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되,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지점들을 몇 가지 거론하고자 한다.

1. '10-11세기 고려-일본 간 교류'에 대한 '평가'의 문제

1) '원정기' 고려-일본 교류 및 '1223년 왜구' 사이의 상관성

저자는 1장에서, 흔히 검토에서 누락되곤 하던 고려 전기 고려-일본 간 교류의 역사를 살피고 있다. 이 시기의 고려-일본 교류사에 대한 이해 없이 이후의 교류를 분석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저자의 이러한 시도는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자는 1장을 맺으면서, 1223년 『고려사』에서 최초로 발견되는 왜구는 이전의 시기, 이른바 '원정기' 시대 고려와 일본 간에 활발하게 진행된 교류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저자가 '고려-일본 간의 민간교류 및 공적 교역'으로 설명한 11세기 원정기 당시 고려를 방문하던 일본인들과, '해적'들이었음이 어느 정도 명확히 인정되는 13세기 초의 왜구는 그 맥락이 상당히 다른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연유에서 그 계승성을 논하려 한 것인지 다소 의아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저자의 견해가 궁금하다.

2) 시대 표기의 문제

아울러 한 가지 '불평'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이 저서는 저자가 일본에서 작성한 학위논문을 번역한 것이어서, 장 제목으로 노출된 시대 표기가

일본사의 시기 구분에 기초해 있다. 특히 1장의 제목인 ‘원정기(院政期)’ 또는 ‘섭관정치(攝關政治)’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책에서도 별 다른 설명이 없다. 한국사 전공자들을 위해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3장의 일본 대외관리제도 기술 및 12세기 중엽 도바원정기(鳥羽院政期)에 대한 설명만 하더라도, 한국사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책으로서는 다소 ‘불친절(?)한 대목이라 생각된다. 일본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독자들을 위한 배려가 가미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된다.

2. “진봉”의 문제

1) 진봉관계의 시작 시점, 또는 상한

저자는 2장에서, 11세기 말 대마도 구당관에 의한 방물 진상을 이미 문종대 이래 다자이후의 상객이나 사쓰마국(살마국) 등이 활발히 행하고 있던 ‘사천무역’으로 규정하고, 진봉관계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고려-대마도 간 진봉관계는 저자가 고려 측 진봉의례의 완성 시점으로 잡은 의종대 이후에나 시작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존중한다 하더라도, 11세기 후반 대마도의 방물 진상 사례들이 어떤 요소들을 결여하고 있기에 저자가 그것을 ‘공적·항시적 무역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들을 보였기에 ‘사천무역’에 불과했던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았는지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한 근거가 제대로 제시되지 못할 경우 의종대 이전 대마도와 고려의 접촉 사례들 또한 ‘진봉행위’와 그리 다르지 않은 행위로 해석되면서, 진봉관계의 ‘상한’이 앞당겨질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2) 진봉관계 형성의 ‘배경’

저자는 1093년 연평도 나포사건 이후 고려-일본 관계가 경색되었다가, 헤이씨의 전성기 당시였던 1169년을 전후하여 대마도 진봉을 매개로 양국관계가 ‘우호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 송의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던 종래와 달리 일본 측의 본격적인 ‘도송(渡宋)’이 시작되면서 송과 일본 사이의 교통이 “쌍방향”으

로 변화하였고, 그 결과 송-일 간에 안전한 항로 확보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고려-일본의 관계도 재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안정적 항로의 확보 문제는 저자가 언급한 '쌍방향 교통' 단계 이전에도 이미 필요한 사항이었을 것이므로, 이 시기에 이르러 새로이 등장한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 저자가 다른 부분에서 제시한 계절풍이나 식수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를 당시 고려-일본 관계 '변화'의 배경으로 제시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그러한 변화가 저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인들이 송에 가는 안정적인 항로가 필요해 고려에 자주 들르게 된 결과'였을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고려에 온 일본인들의 고려국왕 예방 및 '진봉'관계의 시작으로 이어졌다고 볼 논리적 근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진봉관계의 '실질성' 문제

저자가 1169년 송나라 상인과 일본국의 완물 진상 기사를 근거로 진봉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본 것에 대해, 필자는 현재 이의를 제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다만 그러한 진봉관계가 형식적으로나마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나 '실제적으로' 양국관계의 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170년대 이후 1223년 첫 왜구 기사가 등장할 때까지, 『고려사』 내에 일본 관련 기사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간 진봉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1263년 4월 기사에나 '과거의 일'로 거론되었다. 따라서 저자가 상정한 '진봉관계'의 실재성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듯하다. 저자는 12세기 말부터 13세기 중엽의 일본침공 전후까지, 고려와 일본 양국이 '대마도 진봉'을 매개로 우호관계를 유지했다고 보았지만, 정작 그러한 정황이 사료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가 제시한 『평호기』의 1206년 기록이나 『오처경』의 1227년 5월 기록 등은 그러한 관계가 당시 존재했다는 간접 증거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일관되게 작동 중이었는데, 또는 필요에 따라 시기별로 '가동기'와 '휴지기'를 오가는 맥락의 것이었는지까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물론 저자 스스로도 '단속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저자의 고민이 진봉관계의 실질성, 실재성 문제 또한 포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대마도 진봉이나 양측의 외교적 접촉이 촘촘하기보다

성글었다면, 그에 대한 평가도 조정이 요망될 소지가 있다. 아울러 1169년을 전후한 시기의 고려-일본 간 교류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47년 고려를 방문한 "일본 도강 황중문(黃仲文)"은 그 이름으로 볼 때 일본을 왕래하는 송의 도강(상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1169년에는 "송 상인 및 일본국"이 완물(玩物)을 바쳐왔다고 기록되어 '일본국의 방물이 송 상인 편에 고려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봉관계의 세부 시기별 추이에 대한 검토가 논지 전개에 조금 더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4) 진봉관계와 사헌무역의 관계

12, 13세기 진봉관계가 본격화되었다고 보는 저자의 입장에 대해, 필자가 가장 궁금한 대목은 '사헌무역'의 문제이다. 공식적 진봉관계가 가동 중인 상황에도 '사적인' 사헌무역은 당연히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 주체 또한 중첩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공적인 진봉과 사적인 무역은 언제나 병행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과연 저자와 같이 '사헌무역 단계'와 '진봉관계 단계'를 '선후'적인 정황으로 상정할 수 있을까? 물론 사헌무역은 계속 존속하였고, 다만 공식적 진봉이 새로이 시작된 것이었을 뿐이라면, 그러한 시기 구분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저자의 논지 전개에는 '사헌무역은 위축되었다'는 관점이 내재해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럴 경우 이러한 선후관계 설정에는 이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간 학계에서는 교역의 양대 개념으로 '공교역과 사교역'을 제시하며, 정부가 주도한 관영교역과 민간상인들이 주도한 사적 교역을 '별도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중세 동아시아에서 이 두 교역행태가 철저히 분리돼 진행된 것은 아니다. 정부의 관영교역은 언제나 민간상인들을 동반했으며, 민간상인들의 활동은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일본 또한 그로부터 예외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진봉교역과 사헌무역의 관계에 대한 저자의 입장이 어떠한지, 아울러 그것을 별개시하는 저자의 입장을 뒷받침할 근거들, 예컨대 '진봉교역으로 볼 수 없는' 명백한 사례들, '사헌교역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들을 제시해 비교 분석해주었다면 이상적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5) 진봉관계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평가의 문제

저자는 고려-일본(대마도) 간 관계를 단순한 경제교류로 보려는 일본 학자들의 견해에 맞서 그것을 “진봉관계”라는 외교적 관계로 개념화하였고, 그러한 관계를 고려와 대마도 사이의 ‘사적인 국지’ 교역으로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것이 다자이후 등 상급 단위의 인지와 승인 아래 전개된 것이었다는 주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필자 또한 대체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안타깝게도 그와 관련한 직접적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한다.

저자의 경우, 11세기 전반(1026) 다자이후에서 송 상인에게 대재부 관직을 부여하고 송 정부와의 조공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 한 사례, 또는 11세기 말(1093) 다자이후 관료가 거란에 승려를 보내 조공을 사칭한 밀무역을 시도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다자이후가 대외 ‘진봉’형 교역에 적극 나서고 있었던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도 동의한다. 다만 저자는 다자이후가 동일한 맥락에서 ‘고려와 대마도 간 교역에도 개입해 있었을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추정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해외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던 헤이씨(평씨)가 송에 대해 ‘조공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대응을 취하던 시기에, 고려에 대한 대마도의 진봉 또한 항시적 관계로 성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저자의 주장 역시 외람되지만 비약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고려-대마도 간 진봉관계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와는 무관했으되 최소한 카마쿠라 막부의 용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판단에 대한 근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제시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3. ‘일본정벌’과 관련한 제 문제

1) 조이의 역할

저자는 3장에서, 조이 등의 고려인들이 쿠빌라이의 일본정벌을 촉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였다. 그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고려인 조이가 개입되기 전 쿠빌라이는 이미 일본정벌을 고려하고 있었을 가능성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제국의 일본정벌은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초유 작업의 한 일환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원제국의 동남아시아 초유가 본격화한 것은 1280년대 초이다. 인도 최대의 무역중심지 마아바르에 대한 초유가 1279년 시작되었고, 미얀마, 참파, 자바 및 베트남 일대에 대한 접촉도 1280년대 초 본격화되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초유와 정벌은 128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고, 류큐와 샴에 대한 초유도 1290년대 초 진행되었다. 동남아시아 초유 작업은 1290년대 중후반에나 일단락되었다. 그런 점에서 일본정벌 자체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단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조 쿠빌라이의 ‘기획’ 외에 ‘다른 변수(조이의 권유)’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정벌이라는 사안 자체는 동남아시아 초유와 밀접히 연계돼 있었다. 2차 일본정벌이 실패한 직후인 1282년 초, 원제국 정부는 해선 100척에 병력과 수수(水手) 1만 명을 동원하여 “해외(海外)의 제번(諸番)을 정벌”하기로 결정했음에서 그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초유가 한창이던 1280년대, 쿠빌라이는 최소 두 차례 더 일본정벌을 시도했으며(1283, 1286년경), 사망 직전인 1294년에도 일본정벌을 기획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정벌이 ‘고려인들의 개입’보다는 훨씬 더 큰 흐름에 즉하여 추진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실 세조 쿠빌라이의 일본 초유를 ‘조이가 기획했다’고까지 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는 원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또 조이의 보고를 들은 이후에나 쿠빌라이가 관심을 갖게 됐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사안과 관련한 ‘원 정부’의 입장이 어떠했을지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조이가 원 측을 부추겨 일본정벌에 나서게 한 ‘동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가 일본과 가까운 금주 출신이었고 일본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었다는 것만으로는 그가 원제국의 일본정벌을 주선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을 초유하라는 쿠빌라이의 명령에 대해 고려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를 조이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이 조이의 기획설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아니다. 아울러 고려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 쿠빌라이가 분노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조이에 대한 쿠빌라이의 신임이 더 커졌다고 저자가 본 것은 이상하다. 오히려 조이의 정보에 대한 쿠빌라이의 신뢰가 손상되었을 개연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2) 당시 일본을 바라보던 고려인들의 시각

저자는 몽골의 일본 초유를 막으려 한 이장용의 노력이, 고려와 일본의 우호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일본을 바라보는 고려인들의 관점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도 가능할 것 같다. 원제국의 일본정벌 직전의 13세기 전반은 '양국 간 통교'와 '왜구의 고려 침구'가 공존하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1223년 “왜의 침구”가 시작되고, 1225년, 1226년, 1227년에도 소규모 왜선의 경상도 “침구(侵寇)” 기사가 확인된다. 1227년 5월에는 고려정부가 일본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였고, 일본국도 그러한 침구(“구변지죄(寇邊之罪)”)에 대해 사과하면서 “수호호시(修好互市)”를 요청해왔다. 그런데 기사의 뉘앙스로 볼 때 그동안 계속돼오던 우호관계를 지속하지는 것이라기보다, ‘소원한 관계를 복원하지는 요청으로 들리는 측면이 있다. 양국의 관계가 그간 몇 년간의 왜구 문제로 대단히 불편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이후 ‘왜구’ 기사는 다시 줄어들었고, 1240년대 중반에는 일본국에서 다시 방물을 바쳐오기도 한다(1243). 그러나 이번에는 고려의 지방관이 고려에 표류한 일본상선으로부터 물건을 침탈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한다(1244). 이후 일본과 관련된 기사들은 다시금 감소하였다. 1259년에 이르러 일본 관련 기사들이 다시금 등장하지만, 원종이 즉위 후 일본에 사절을 보내 해적 금지를 요청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1260년에 제주부사(濟州副使)를 방호사(防護使)로 삼는 등 대일본(또는 대왜구) 방어를 강화했으며, 1263년에는 왜가 금주 근처 여러 주현의 조공선을 약탈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에 고려정부는 일본에 다시 사신을 보내 금적(禁賊)을 요청하며, “이전에 통교(通交)한 이래, 해마다 상례(常例)로 [일본에서(대마도)] 고려에 진봉(進奉)을 해왔고, “약정된 2척” 이외의 선박이 연해 마을들을 소란케 하면 안 되었는데, “최근 선박 1척이 약탈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 기사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간 왜구의 침구에도 불구하고 진봉 차원의 양국 간 교류는 계속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문제는 ‘통교를 시작한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저자는 그것을 1169년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유추한 결과다. 앞서 살펴본 『고려사』의 기사만으로 양국 간 교류의 연혁을

재구성해볼 경우, 1263년에 언급한 “통교(또는 “진봉”)”는 1227년에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1227년의 ‘시세(是歲)’ 기록에는 같은 해 5월 고려가 사신을 파견할 당시 일본에 ‘역세(歷世)의 화호(和好)에 내침(來侵)이 불가(不可)하다’는 논리를 펴며 왜구 방지를 요청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통교’가 최소한 1227년 ‘이전’에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문구는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더 나아가 1227년 일본 측의 수호통상 요청이 고려에 의해 ‘거부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통교(또는 “진봉”)가 시작된 상한은 1240년대로 늦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일본국의 방물진상에 대한 기록이 1243년에 오랜만에 보이고, 고려의 지방관이 표류한 일본선박을 침탈했다가 정부에 의해 처벌된 기록도 1244년 굳이 등장한 것에서, 통교가 1240년대 이후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그러한 통교가 이후 1263년에 다시 언급된 것이, 1265년 고려가 대마도 해적을 잡아 약탈품을 회수하면서도 같은 해 6월과 7월 고려에 표착한 일본 승려 및 상선들을 일본으로 돌려보내는 등의 ‘양면정책’을 쓸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았나 한다.

따라서 진봉 자체는 존속했어도, 그것이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까지 담지하지는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즉, 진봉과는 무관하게 고려와 일본 간의 관계는 요즘 표현대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당시 상황이 그러했다면, 과연 고려인들이 통교가 진행 중인 이유만으로 원제국의 일본 초유에 대해 비판적이기만 했을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통교관계가 작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왜구의 침구가 계속되고, 고려의 관과 민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장용의 노력을 양국 간의 우호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만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일본정벌이 구체화될 경우 고려의 노동력과 재화가 강제 동원되고, 고려의 정치적 운신의 폭 또한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가 이장용 등으로 하여금 원 사신의 ‘도일(渡日)’을 적극 만류하게 한 주원인이었다는 ‘전통적 해석’을 함께 제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3) 삼별초의 문제

저자는 삼별초가 1271년 3월과 4월 금주를 공격한 것을 두고, ‘원제국의

일본 침공 및 정벌을 저지하려 한 시도'라 평가하였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판단은 당시 삼별초의 군사적·정치적 영향력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 것이 아닌가 한다.

삼별초가 일본에 원조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므로, 삼별초가 그 요청의 대가로 일본에 군사적 지원 또는 협력을 제공하려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된다. 아울러 저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삼별초는 무신정권의 군사력으로서, 무신집권기 고려정부와 대마도 사이의 관계를 잘 알았을 것이며 외교적 접촉의 경험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는 삼별초와 일본 측의 군사적 유대 또는 연대가 오늘날의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 비해 훨씬 큰 의미와 위력을 가지는 것이었을 수 있다. 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저자의 취지에는 필자 역시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삼별초가 원제국과 고려 측의 합동 일본정벌을 정녕 저지하고 싶었다면, 1271년 감행된 금주 공격류의 도발이 이후 1272년, 1273년, 1274년에도 계속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삼별초가 고려군과 격돌하며 그럴 여유를 내지 못했을 수도 있겠으나, 그와 관련한 아무런 시도도 사료상 보이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과로만 놓고 볼 때, 일본과 유대하거나 일본 측에 군사적 협조를 제공하고자 한 삼별초의 의지가 그리 오래 또는 일관적으로 지속되지는 못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4) 일본정벌을 기획한 쿠빌라이의 '의도' 문제

한편 쿠빌라이가 일본정벌에 나선 것이 일본의 정치와 법률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본 저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실로 동의하기 어렵다. 주지하듯이 쿠빌라이는 화북지역의 한법적 법, 제도를 익히는 데에도 바쁜 상황이었다. 정치제도는 한법을 토대로, 재정구조는 서역인 재상들의 지휘 아래 짜기는 과정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일본의 전장제도를 참조하려 했을 가능성은, 한일 고대사의 오랜 내력을 고려할 때 상정하기도 어렵거나 상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아울러 원제국 정부가 초유 대상으로 삼았던 술한 지역들 중 해당 지역의 전장제도를 익히려 한 경우는 없다는 점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전장제도에 대한 쿠빌라이의 언급은 조이의 발언을 재인용한 것이어서 '원 황제로서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외교적

수사에 근거해 원 황제의 의도를 짐작하는 것도 무리한 일이라 생각된다. 저자의 이 같은 입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당시 일본 측 정치와 법률의 간단한 내용 및 특질을 소개하고, 그것이 중국 측 제도에 비해 어떤 장단점을 지니고 있었으며, 몽골 위정자로서의 쿠빌라이가 그에 매력을 느낄 만한 지점들은 무엇이었는지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는 것이 필요했으리라 생각된다.

5) ‘충렬왕대 왜구’의 문제

3장에서 느끼는 마지막 아쉬움은 13세기 후반 ‘충렬왕대의 왜구’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한 침구를 일본정벌에 대한 일본인들의 복수로 해석하거나, 일본 측의 진봉요청을 거부한 고려의 책임이라 주장하는 식의 황당한 일본 측 견해들만 비판 대상으로 거론된 것에 그쳐 이 시기 왜구 침구 사례가 다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이후 다시금 수그러든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추가 설명이 요망된다.

4. 대마도의 상황

1) 쇼니씨의 ‘역할’ 문제

저자는 4장에서, 대마도에서는 쇼니씨와 소씨에 의해, 막부의 ‘아쿠토’ 및 해적 진압책이 진서탐제 관할지역이나 서국의 다른 지역들보다 더욱 철저히 시행된 것에 주목하였다. 즉, 일본침공 국면이 수그러든 이후에도 해적 활동이 적었던 이유를 쇼니씨와 소씨의 강력한 해적 금압책에서 찾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일본정벌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쇼니씨와 소씨가 강력한 해적 금압력을 발동할 정도의 세력과 힘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2) 원제국-일본 교역의 문제

한편 14세기 초 일본과 원 강남지역 사이의 교류가 가능해지면서, 왜구들의 활동이 ‘순화’되었을 가능성은 상정할 수 없을까? 저자도 지적했듯이 당시 일본의 통치자들은 원제국-일본 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다. 그러한 추세는 민간 차원의 교류와 교역으로도 이어져 해적 활동의 존립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민간선박을 노리는 해적 활동이 오히려 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 시기 해적들의 활동이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따라서 해적 활동의 완화나 감소 이면에, '민간교역의 증대'라는 변수가 작동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해적금압책의 선봉에 서 있던 대마도의 핵심세력 쇼니씨와 소씨가 대원(對元) 교역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고 어떤 활동을 보였는지가 궁금해진다.

3) 쇼니씨의 '변신' 문제

한편 저자는 1350년 왜구의 한반도 침구가 재개된 원인을 논하는 과정에서, 대마도의 쇼니씨 또한 당시 한반도를 침구하던 왜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13세기 후반까지는 해적 금압을 주도하여 왜구 위축에 기여했던 이 세력이 갑자기 왜구의 중심축이 되었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제시되어야 할 것 같다.

4) 14세기 중엽의 왜구 및 '남조(南朝)', '아쿠토'의 문제

저자는 1350년 왜구 재개의 배경을 논하면서, 같은 남조세력이면서 서로 갈등하고 있던 아시카가 다다후유(足利直冬)와 쇼니 요리히사(少貳頼尚) 측 군사들의 동향이 '왜구의 한반도 침구 시기'와 몇 차례나 일치하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그를 통해 양자의 연관성을 찾아내려 한 저자의 시도에 대해서는 필자 또한 그 적절성에 공감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당시 왜구의 고려 침입은 너무나 빈번하고 또 상시적이었으므로, 일본 내의 특정한 상황이나 추세와 '실시간 비교'를 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이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저자 역시 쇼니 요리히사 측이 반드시 한반도를 침구한 왜구의 핵심이었던 것은 아니며, 다른 세력들, 더 나아가 남조 정서장군부(征西將軍府)의 수군 중 어떤 세력도 그 같은 침구행위를 저질렀을 수 있다고 보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아울러 저자는 왜구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면서, 13-14세기 고려를 습격한 왜구가 가마쿠라시대 중-말기부터 남북조시대에 걸쳐 '아쿠토'로 불린 사회적 존재와 거의 같은 존재였다고 평가하였다. '사회적 패악세력'

이러는 점에서 양자의 행태가 비슷한 것에 주목하여 왜구를 ‘해적’으로 한정해 보지 말고, ‘아쿠토’라는(헤이안시대 말기에 처음 등장하여 가마쿠라 막부 중기 이래 큰 사회 문제로 대두) 더 넓은 사회계층 안에서 추적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도에도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저자가 왜구의 군사적 배경으로 제시한 ‘남조군’과 사회적 배경으로 제시한 ‘아쿠토’는 경우에 따라 중첩과 분리를 오갈 수 있는 존재들로 보이는 만큼, 양자의 관계가 시기별로 어떤 추이를 보였는지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 같다. 다시 말해 ‘아쿠토와 남조군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 ‘과도기’의 상황에 대한 주목 문제

저자는 13세기 왜구와 14세기 왜구 간의 차이를 논하고, 그 사이에 이른바 ‘왜구 공백기’가 발생한 경위를 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13세기 왜구와 14세기 왜구 사이의 ‘연속성’ 또한 논하고 있다. 필자로서도 1320년대 중반, 구체적으로는 1323년 잠시 재개된 왜구 침구의 배경이 대단히 궁금했기 때문에, 대단히 바람직한 시도라 생각된다.

그런데 저자는 ‘1323년’의 사례를 일종의 ‘과도기적 사례’로 규정하면서도, 그 사례의 어떤 특징이 13세기 후반 왜구와 14세기 후반 왜구를 이어주는 지점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반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연속성’을 논하고자 한 저자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세기 간격의 큰 그림은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그 “50년 단위”들의 내부에 존재했던 부침(浮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데서 오는 아쉬움은 3장과 2장의 서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1227년과 1260년 사이에는 일단 왜구의 침구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더 나아가 1093년의 “송·일 해적선” 나포사건 이후, 1169년의 “일본국 완물 진상” 시점 사이에 왜구의 침구 사례가 보이지 않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13세기 후반-14세기 후반의 공백기와는 다른 이러한 “작은 공백기” 당시, 고려와 일본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은 과연 어떠했을까? 그에 대한 분석이 향후 나오기를 기대한다.

6) 단상

마지막으로 설익은 생각을 하나 제시해본다. 왜구의 핵심을 ‘남조의 군사’로 보게 될 경우, ‘왜구’라는 개념과 표현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물론 ‘해적 일본인’의 명예를 벗어나고자 졸렬한 논리를 펴는 일본 측 견해의 연장선상에서 왜구라는 개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분석한 것처럼 1350년 이후의 왜구, 즉 14세기의 왜구는 13세기와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단순한 해적들이 아니었음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용어적 차원에서 앞으로는 ‘왜구’보다 ‘왜군’ 또는 ‘일본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IV. 맺음말

저자의 책을 읽은 이후, 필자의 마음은 대단히 급해졌다. 왜구라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저자가 이렇듯 정치하게 분석해놓았으니, 이제 그것을 당시 동아시아의 교역체제 속에서 거론하는 작업은 필자를 비롯한 교역사 연구자들의 몫이 되었기 때문이다.

13-14세기 일본의 대외무역, 그 주체와 여건, 항해술과 조선술의 문제, 주력상품과 주요 수입품 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대단히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한 부분들이 불법적인 왜구와 어느 정도 분리되거나 또 중첩되어 있었는지, 14세기 중엽 남조의 군사세력들과는 어느 정도 분리되거나 중첩되었는지, ‘왜구’나 ‘아쿠토’로 지칭되는 세력들 중 어느 정도나 합법적 대외무역에 개입해 있었고 어느 선부터는 불법적 살육과 침략을 일삼았는지, 바야흐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할 때가 된 것이다. 이런 연구를 통해, “왜구는 해외무역에 종사하는 일본상인들이 자위를 위해 무장한 데에서 시작되었고 13세기 고려를 습격한 왜구도 무장상인단이었다”면서 ‘해적’으로서의 왜구의 면모를 희석시키는 데만 골몰해온 일본 측의 논리를 극복하고, 이 시기 동북아시아의 교역상을 더욱 온전하게 재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저자의 이번 저서는 한국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또는 한국사 연구자들이 그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 일본 측 자료들을 폭넓게 활용하여 10-14세

기 고려-일본 교류사 연구를 대폭 보완한 수작이자 역작이라 할 수 있다. 향후 한국중세사 연구자들 및 경제사 연구자들의 협력체제가 구축돼 저자가 시작한 작업이 더욱 풍성한 모습으로 진화해가기를 기대해 본다.